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1-07

I. 기본권의 쟁점과 전망

망명권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망명권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2018-01-07

망명권

I. 들어가며	07
II. 외국인의 기본권 논의	08
1. 헌법상 기본권	08
2. 기본권의 유형별 검토	09
3. 기본권의 확대	12
III.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망명권 신설에 관한 논의	13
1. 대한민국 난민정책의 역사	13
2. 망명권 신설과 관련한 의견	15
3. 망명과 난민에 대한 보호	16
4. 망명과 관련된 국제법상의 원칙	17
IV.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망명권을 인정한 외국입법례	22
1. 프랑스	22
2. 독일	26
3. 그 밖에 헌법상 망명권을 인정한 입법례	30
V. 나가며	33

I. 들어가며

- “망명권(亡命權, Asylrecht)”은 정치적 난민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비호권(庇護權, Right of asylum)이라 하기도 함
- 우리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¹⁾
- 198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치적 피난민에 대한 보호는 소수의 국가가 국내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도 이를 보장하는 국내법규가 없으며 개개의 조약을 떠나서 일반국제법상의 보장이 확립된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정치적 난민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음²⁾
- 이후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 「난민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정치적 난민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 우리 헌법상 망명권 또는 비호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정치범, 피난민 등)가 외국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망명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함

1) 「난민법」 제2조제1호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II. 외국인의 기본권 논의

1. 헌법상 기본권

-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내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함
-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인권)와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시민권)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임
-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있음
- 우리 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됨(상호주의)
 -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됨
 - 통설과 판례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무국적자도 포함)³⁾
 -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 내국인 대우원칙(국내적 표준주의)
 - 인권 최소수준 보호원칙(국제적 표준주의)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 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인권 최소수준 보호원칙을 채택하더라도,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입국 및 체류의 자유가 인정되지는 아니함⁴⁾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관하여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음⁵⁾
-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근거는 외국인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데 있음⁶⁾
 - 유사한 지위란, 국가와 대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고 보기도 함
 - 다만, 기본권 조항들은 ‘국가와 대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하지만, 기본권 조항들 중에는 국가와 대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주권자’, 또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기본권도 있음
 - 이러한 기본권에 관하여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주권자’로서의 지위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

2. 기본권의 유형별 검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국가와 대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기본권으로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2, 2014. 4. 24.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지만, 참정권과 같이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에 관한 평등권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참조).”

● 평등권

- 평등권은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차별취급을 거부하는 권리로서, 그 자체로는 실체적인 내용을 갖지 않으므로, 차별취급의 내용에 따라, 자유권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은 자유권 문제로, 사회적 기본권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은 사회적 기본권 문제로, 참정권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은 참정권 문제로 보아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⁷⁾

● 자유권

-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특정한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포함함
- 어느 경우에도, 국가와 개인의 대립적 지위를 전제로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는 권리임
- 명칭이 무엇이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자유권은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

● 참정권

- 우리 헌법상 참정권, 즉, 선거권(제24조), 피선거권 또는 공무원임권(제25조),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제2항)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와 관련된 기본권에 해당함
- 외국인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음⁸⁾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9, 2014. 8. 28. :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격제도 자체를 다룰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2, 2014. 6. 26. : “참정권과 임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사회적 기본권

- 대부분의 사회적기본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국민을 전제로 함
- 헌법상 교육의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은 모두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속과 정체성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임
- 국가는 그 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하고, 일할 자리를 제공하며, 환경을 보전하며, 교육의 기회를 제공
- 국민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에서 국가에 대해 위와 같은 급부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교육과 근로, 환경보전의 의무도 부담
- 국가와 대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국민을 전제로 한 기본권임
- 따라서 그러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성이 부인됨

● 청구권적 기본권

- 손실보상청구권(제23조제3항),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등이 있음
- 국가와 대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에 관련된 기본권들로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권리들임
-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해당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됨

3. 기본권의 확대

- 내부로의 확대

- 법 공동체의 내부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으며 동등한 권리를 지닌 것으로 인정 받지 못한 집단을 대상으로 함
- 노동자, 종교적 소수집단, 동성애자, 아동 등

- 외부로의 확대

- 시민권으로부터 인권으로의 확대
- 난민과 망명자, 이주민, 무국적자 등

III.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망명권 신설에 관한 논의

1. 대한민국 난민정책의 역사

- 1950 ~ 1994

-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
- 대한민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 가입
- 베트남 보트피플 한국 상륙, UNHCR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지원
- 6·25 전쟁으로 파괴된 대한민국의 구호와 재건을 목적으로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립, 6·25 실향민을 돌봄

- 2000 ~ 2005

- 대한민국 정부 UNHCR 집행위원회 회원국 선출, 현재까지 활동 중
- UNHCR 한국사무소 개소
- 한국 내 난민 최초 인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협력하여 난민지위신청자 법률지원
- 아름다운 재단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과 협력하여 난민지위신청자 법률지원

- 2006 ~ 2007
 - 7월 UNHCR 한국대표부 승격
 -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최소한의 생활 보장 권고
- 2008
 - 한국 내 비호신청인 2,000여명, 난민인정자 101명, 인도적지위자 71명 넘어섬
 -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인권실태 조사
 - 출입국 관리법 내 난민 조항 일부 개정
- 2009
 - 한국 내 비호신청인 2,400여명, 난민인정자 145명, 인도적지위자 83명 넘어섬 (9월말 기준)
 - 출입국 관리법 내 난민 조항 일부 개정
 - 온라인·오프라인 난민 후원활동 시작
- 2010 ~ 2013
 -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ExCom) 의장국 선출
 - 난민법 제정 및 시행

2. 망명권 신설과 관련한 의견

(1) 신설 필요 vs 신설 유보

- 신설 필요

-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망명권을 신설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국제조약을 존중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할 필요

- 신설 유보

- 불법 체류 및 경제적 목적의 악용 우려가 있으므로 명시적 도입에 신중할 필요

(2) 개헌특위의 논의 경과

- 망명권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망명권 신설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논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조약을 존중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명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 등 하위법에 의한 제한 규정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 규정에 따라 규정 가능하므로 망명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북한으로의 탈출죄를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

- 망명권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망명권인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보장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음

- 이에 대하여,

- 외국인에게 망명권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망명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 다른 국가로 나가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망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개진됨
- 또한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망명권 규정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음

(3) 입법안

현행 헌법	개정안
-	제24조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3. 망명과 난민에 대한 보호

- 망명 및 난민의 권리(ASYLUM & THE RIGHTS OF REFUGEES)
 - 각국은 수세기 동안 박해로부터 피해온 개인과 집단에 대한 보호권을 부여해 옴
 -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은 타국에 망명을 요청하고 누릴 권리를 보장함
 -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의 관행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기본적 권리로서의 정치 망명이라는 개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에서 처음으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표현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 ①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 난민

-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말함
-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들에서 확대되어, 전쟁이나 기타 폭력에 의해 원래 살던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지칭
- 망명권(right of asylum)을 행사하여 난민(refugee)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망명신청자(asylum seeker)라고 함

4. 망명과 관련된 국제법상의 원칙

(1) 정치범불인도의 원칙(Principal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ces)

● 국제법상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적 격동기에 성립된 제도임⁹⁾

- 프랑스 공포정치를 피해 나온 정치범들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보호해 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 혁명을 추구하다가 프랑스로 도망 온 정치범들은 프랑스에서 보호해 준 것에서 유래
- 1973년 프랑스헌법 제120조는 자유를 위하여 도망 온 외국인 정치범에게 망명처를 제공한다고 규정

9) 김한택, "망명과 국제법", 『강원법학』 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996. 11, 264면 이하의 내용임

- 정치범죄는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구분하기도 함¹⁰⁾
 - 순수정치범죄는 범죄행위가 직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것으로 보통범죄의 요소를 결하고 있음
 - 반역죄, 폭동교사죄, 간첩죄 등이 있음
 - 위의 세 가지 범죄가 순수정치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보통범죄로서의 기본적 요소, 예컨대 형법상의 범의가 없음
 - 둘째, 범죄의 목적이 현존 정부의 공권침해이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기존의 정치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음
 - 셋째, 범죄의 목표가 정부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권(私權)침해가 없음
 - 넷째, 범인이 주로 공적관심의 동기에서 범행한 것이며, 복수, 증오와 같은 개인적 고려가 아니라 이타적, 애국적 감정에 의하여 범행이 수행됨
 - 다섯 째, 불인도의 이유로서 확산범죄적 성질이 있음
 - 상대적 정치범죄는 순수정치범죄행위에 보통범죄의 요소(예를 들어, 살인, 방화, 절도 등)가 내포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함
 - 상대적 정치범죄는 정치적 성격과 보통 범죄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정치범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과 스위스 법원의 판단이 다름
 - 우리 법원은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중공의 정치,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유중국으로 탈출하고자 민항기를 납치한 이 사건에서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민간항공기를 납치한 행위는 상당하다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보호

10) 김한택, 앞의 글, 265면~266면.

하려는 이익은 피고인들의 자유였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승객 등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신체의 위험과 항공여행의 수단인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에 대한 침해인 점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할 것이며,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항공기납치행위가 긴급,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유사한 사건이 스위스에서도 발생한 바 있음¹¹⁾

- 1952년 발생한 Rekavic, Bjelanovic and Arsenjevic 사건은, 3명의 유고슬라비아 여객기 승무원이 스위스로 향로를 변경하여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 사건인데, 유고당국은 범인인도의 근거로 범인들이 공공교통의 안전을 침해하였고, 재산의 불법적인 취득, 그리고 다른 승무원을 구금한 사유를 들었음
- 이에 대해 스위스 연방법원은 동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근거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내세워 범인인도를 거부하였음
 - 첫째, 범인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 하에 수행된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여야 함
 - 둘째, 범죄와 정치적 목적 사이의 연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셋째, 정치적 동기가 보통범죄보다 반드시 우월해야 함

- 동 사건에서 승무원들의 범죄 행위의 목적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체제를 탈출하려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탈출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다른 승무원에 대한 범죄는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범인의 인도를 거절하였음

(2)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al of non-refoulement)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광의로, 난민은 그가 처하게 될 박해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위험을 지닌 어떠한 국가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

11) 김한택, 앞의 글, 271면.

- non-refoulement란 용어는 프랑스어의 refouler(추방하다, 뒤로 밀어넣다)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유럽대륙에서 이민통제와 관련하여 국경에서 불법적으로 입국하려다가 발견된 사람들을 약식으로 재인도하거나 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자들의 입국을 즉석에서 거부하는 의미로 사용
- 국제법상 망명과 관련되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채택된 것은 1967. 12. 14. UN 총회 결의 2312(XII)에 의해서 채택된 “영토적 망명에 관한 선언”에서임
 - 동 선언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국경에서의 입국거절이나 또는 그가 망명을 구하는 영역 내에 이미 입국한 경우에는 박해를 받게 될 여하한 국가로 추방 또는 강제송환과 같은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제1항의 원칙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 또는 사람의 대량유입의 경우처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부이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여하한 경우에 동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정당화되는지를 국가가 결정해야 할 경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잠정적 망명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타국으로 출국 할 기회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도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중요하게 파악하여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체약국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게 될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또는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당해 체약국의 사회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난민은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의 향유를 요구할 수 없다.

- 우리 「난민법」에서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¹²⁾

-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¹³⁾고 규정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예외 사유로 다소 소극적으로 규정¹⁴⁾

12)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13)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14)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대한국제법학회, 2012. 6, 95면.

IV.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망명권을 인정한 외국입법례

1. 프랑스

- 유럽에서 망명 신청이 많은 국가로 헌법상 망명권(droit d'asile)을 인정하고 있음

Article 53-1

La République peut conclure avec les États européens qui sont liés par des engagements identiques aux siens en matière d'asile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es accords déterminant leurs compétences respectives pour l'examen des demandes d'asile qui leur sont présentées.

Toutefois, même si la demande n'entre pas dans leur compétence en vertu de ces accords, les autorités de la République ont toujours le droit de donner asile à tout étranger persécuté en raison de son action en faveur de la liberté ou qui sollicite la protection de la France pour un autre motif.

헌법 제53-1조

-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연결된 유럽 국가들과 사이에 해당국가에 제출된 망명 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상기의 협정 하에서 망명요청이 자국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 프랑스 망명권의 역사

-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망명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헌법 해석을 통하여 망명권을 인정
 - 1946년 헌법 전문에서 망명권을 인정 : '자유를 위한 행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은 공화국 영토 내에서 망명권을 가진다'
 - 제5공화국 헌법은 1946년 헌법 전문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

- 현행 헌법 전문
 -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의 前文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와 2004년 환경헌장에서 정의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애착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화국은 이러한 원리 및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의 원리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는 의사를 표명 하는 해외영토에 대하여 자유·평등 및 박애라는 공동이념에 기초를 두고 그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구상된 새로운 제도를 제공한다.”
- 현행 헌법 제53-1조에서 망명권 규정(1993년 11월 25일 신설)
- 1952년 7월 25일 망명권에 관한 법률(la loi n° 52-693 du 25 juillet 1952 relative au droit d'asile)을 제정하여 망명권을 인정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
- 1951년 7월 28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ve au statut réfugiés)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제정
- 1952년 법률을 개정하는 2003년 12월 10일 법률(loi n° 2003-1176 du 10 décembre 2003 modifiant la loi n° 52-893 du 25 juillet 1952 relative au droit d'asile)로 사인에 의한 박해까지도 난민의 개념에 포함
- 통합법전 제정하여 시행: 1945년 11월 2일 프랑스에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l'ordonnance n° 45-2659 du 2 novembre 1945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과 1952년 7월 25일 망명권에 관한 법률을 통합
- 통합법전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그리고 망명권 에 관한 법전(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프랑스 헌법상 망명권의 성격
 -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
 -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1993년 8월 13일 결정 : CC n° 93-325 DC, 13 août 1993
 - 가장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망명권을 인정
 - ‘헌법적 가치로서의 원칙인 망명권에 대한 존중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외국인 임시로 프랑스 영토에 그의 요구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머무르도록 허용된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질서의 유지와 이러한 요구와의 조화를 조건으로 하여 망명신청자에게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체류의 허가는 프랑스 국적의 사람들이건 외국국적의 사람들이건 혹은 무국적자이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헌법적 특징의 기본권을 형성하는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외국인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 199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면서 1946년 헌법 前文을 인용하기 시작하여 행정최고재판소(Conseild'Etat)도 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
 - 199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망명권은 헌법상의 주관적 권리의 성격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헌법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프랑스 헌법 개정과 망명권
-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제정 이래 1990년 이후로 헌법 개정 빈번히 이루어짐
 - 프랑스 국내법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기 위함
 - 유럽연합을 위한 헌법 개정 중 1993년 11월 개정은 망명권과 관련됨
 -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망명권에 관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위헌 선언된 법률에 맞추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

- CC n° 93-325 DC, 13 août 1993
 - 1993년 8월 24일 외국인의 이민과 입국, 체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은 프랑스에 신청된 망명요구에 대한 심사권이 1990년 6월 15일의 Dublin협정의 규정들, 1990년 6월 16일의 쉥겐(Schengen)협정의 규정 등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망명 신청사건의 신청자가 프랑스의 난민보호국에 난민자격인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에 대하여 1993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원칙인 망명권에 위반된다는 결정
- 자유를 위한 활동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은 프랑스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망명의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1946년 헌법 前文 제4조에 위배되고 또한 방어권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 위헌결정이 있은 후 정부가 원래 의도한 대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논란
- 프랑스 정부는 헌 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양원의 의결을 거쳐 1993년 11월 19일 양원 합동집회에서 찬성 698표, 반대 157표, 기권 20표로 헌법개정안이 승인
- 1993년 11월 25일 헌법개정을 통하여 제53-1조를 신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률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 것이라 비판이 제기
-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제협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 비준 또는 승인의 허가는 헌법 개정이 있은 후에만 행하여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체결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률의 경우에는 합헌성 통제를 하는 것이므로 법률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

2. 독일

● 독일 망명권의 역사

- 19세기 독일은 정치적 망명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1929년 독일 범죄인 인도법은 형사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수립. 이에 대한 결정은 경찰에서 법원으로 이관
- 1949년 독일연방기본법 및 동독 헌법에서 정치적 망명권 인정
- 당시 초안은 세계 모든 정치적 난민에게 망명권 부여
- 1993년 망명권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됨 : 제2항, 제3항, 제4항

● 기본법 제16a조에서 망명권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예정

GG Art 16a

(1) Politisch Verfolgte genießen Asylrecht.

(2) Auf Absatz 1 kann sich nicht berufen, wer aus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oder aus einem anderen Drittstaat einreist, in dem die Anwendung des Abkommens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und der Konvention zum Schutze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sichergestellt ist. Die Staaten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ie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zutreffen, werden durch Gesetz,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bestimmt. In den Fällen des Satzes 1 können aufenthaltsbeendende Maßnahmen unabhängig von einem hiergegen eingelegten Rechtsbehelf vollzogen werden.

(3) Durch Gesetz,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können Staaten bestimmt werden, bei denen auf Grund der Rechtslage, der Rechtsanwendung und der allgemeinen politischen Verhältnisse gewährleistet erscheint, daß dort weder politische Verfolgung noch unmenschliche oder erniedrigende Bestrafung oder Behandlung stattfindet. Es wird vermutet, daß ein Ausländer aus einem solchen Staat nicht verfolgt wird, solange er nicht Tatsachen vorträgt, die die Annahme begründen, daß er entgegen dieser Vermutung politisch verfolgt wird.

- (4) Die Vollziehung aufenthaltsbeendender Maßnahmen wird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und in anderen Fällen, die offensichtlich unbegründet sind oder als offensichtlich unbegründet gelten, durch das Gericht nur ausgesetzt, wenn ernstliche Zweifel an der Rechtmäßigkeit der Maßnahme bestehen; der Prüfungsumfang kann eingeschränkt werden und verspätetes Vorbringen unberücksichtigt bleiben. Das Nähere ist durch Gesetz zu bestimmen.
- (5) Die Absätze 1 bis 4 stehen völkerrechtlichen Verträgen vo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untereinander und mit dritten Staaten nicht entgegen, die unter Beachtung der Verpflichtungen aus dem Abkommen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und der Konvention zum Schutze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deren Anwendung in den Vertragsstaaten sichergestellt sein muß, Zuständigkeitsregelungen für die Prüfung von Asylbegehren einschließlich der gegenseitigen Anerkennung von Asylentscheidungen treffen.

기본법 제16a조

- 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 ②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인권 및 기본권의 보호협정이 적용되는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제1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 ③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법적 현실, 법률적용 및 일반적인 정치적 상황에 기초하여 정치적 박해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형벌이나 취급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반증이 없는 한 정치적으로 박해받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 ④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제3항의 경우와 명백하게 이유가 없거나 또는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경우에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혹이 있을 때만 법원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의견표명이 지체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에 체결된 국제법상의 조약, 그리고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으로부터의 의무, 인권과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협정, 망명결정의 상호 인정을 포함하는 망명요청의 심사를 위한 유럽연합체의 국가와 제3국과의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본법 제16조a에 따라 독일 입법자는 외국인법과 이민법 (Aufenthaltsgesetz)을 통하여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
- 난민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추방자와 난민의 문제에 관한 법률 (Bundesvertriebenengesetz: BVFG)”을 제정

- 1992년 “난민절차법(Asylverfahrensgesetz:AsylVfG)”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
-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 한 국가의 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거주하던 곳을 떠나 정치적 또는 자유의 박해, 전쟁의 위험 등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피신한 자
- 독일 연방 난민청 또는 법원이 외국인에게 당해 국적국가에서 또는 무국적자로서 상주 체류지를 두고 있는 국가에 독일 이민법(Aufenthaltsgesetz) 제61조 제1항에 언급된 위험이 존재함을 불가항력적 결정을 통해 확인할 경우 난민의 지위를 인정
- 난민절차법 제1조
 - “정치적으로 박해당한 자로서 기본법 제16조a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신청하는 외국인 또는 추방자와 난민의 문제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정치적으로 박해당한 자로서 기본 법 제16조a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신청하는 외국인
 - “추방자와 난민의 문제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외국인
- 독일난민법의 특징
 - 독일은 헌법의 기능을 하는 기본법(Grundgesetz, GG) 제16a조에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의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은 이에 부리를 두고 제정
 - 1953년 이전에는 외국인법과 이민법 등을 개정하여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 1953년 5월 19일 난민의 지위와 수용 절차를 규정하는 독자적인 법률인 “추방자와 난민의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2년 이와 별도로 “난민절차법”을 제정
 - 난민 업무를 독립된 행정기관인 “연방 이민 및 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m, Bundesamt)”이 관할. 이 기관은 연방 내무부장관에 소속

- 난민절차법은 인권보호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호급부를 제공. 난민인정자는 물론 신청자 및 그 가족까지 보호
 - 유엔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국내 적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수단으로 난민 관련 기관과 국제난민 기구(UNHCR)의 관계에 관한 규정인 난민절차법 제9조를 규정
 - 독일 난민절차법은 제22조에 난민의 주별 할당 제도를 규정. 즉 난민신청자가 16개중에서 거주할 주를 택하고, 행정합의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할당에 대한 비율을 정함
 - 실향민과 경제난민 등 난민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 망명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¹⁵⁾
- 첫째, 국제법상의 망명권은 망명을 허가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기본법 소정의 망명권은 관련 당사자(망명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 독일 기본법 제16조a 조항의 “정치적 박해를 받는자(politisch Verfolgte)”를 해석함에 있어서 「난민의 지위의 관한 협약」제1조A (2)의 “난민” 개념이 중요한 표준이 되는데,
 - 정치적 박해인지 여부는 순전히 박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정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될 뿐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국가기관의 영역에서 자행되었을 필요는 없으며,
 - 망명권 조항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는 것이므로 박해국 또는 피박해자의 정치적 견해가 어떠한 내용인지 또 그것이 과연 비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서는 안 됨

15) 권영성, “망명자·정치적 난민에 대한 헌법적 보호”, 『고시연구』 25(2), 고시연구사, 1998. 2, 160면.

3. 그 밖에 헌법상 망명권을 인정한 입법례

● 스위스

Art. 25 Protection against expulsion, extradition and deportation

1. Swiss citizens may not be expelled from Switzerland and may only be extradited to a foreign authority with their consent.
2. Refugees may not be deported or extradited to a state in which they will be persecuted.
3. No one may be deported to a state in which they face the threat of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o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헌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추방, 인도 및 강제이주로부터의 보호)

- ① 스위스시민은 국외로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외국기관에 인도될 수 있다.
- ② 난민은 강제 이주되거나 그가 박해를 받는 국가에 송환되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이주 되지 아니한다.

● 중국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三十二条

中华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在中国境内的外国人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中华人民共和国对于因为政治原因要求避难的外国人，可以给予受庇护的权利。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유럽연합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8 Right to asylum

The right to asylum shall be guaranteed with due respect for the rules of the Geneva Convention of 28 July 1951 and the Protocol of 31 January 1967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기본권 헌장 제18조

망명권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51년 7월 28일의 제네바 협약과 1967년 1월 31일의 의정서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이하 “유럽연합관련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된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헌법

B. 망명재판소

제129c조

망명재판소는 심급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재판한다.

1. 망명사건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
2. 망명사건에 관한 재판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불복

제129d조

(1)망명재판소의 소재지는 연방수도인 빈이다. 지원의 설치는 허용된다.

(2)망명재판소는 소장, 부소장 및 필요한 수의 그 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망명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3)망명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은 법학이나 법학 및 국가학을 전공하여야 하며 적어도 5년의 법률적인 직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4)망명재판소의 구성원은 판사이다. 제8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88조제1항과 제2항은 준용된다.

제129e조

(1)망명재판소는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하거나, 재판소총회에 의하여 또는 소장이 위원장직을 맡으며 재판소총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발되는 위원회에 의하여, 망명재판소의 구성원 중에서 구성되는, 합의부를 통해 재판을 한다. 기존의 행정법원 판례와 차이가 있거나, 행정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또는 해결되어야 할 법률문제가 기존의 행정법원 판례에서 통일적으로 답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중요성이 부여되는 법률문제 및 상당수의 절차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신청으로, 증원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한다(기본원칙에 대한 재판). 연방내무부장관의 신청으로 기본원칙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2)법원총회 또는 그 위원회는, 연방법률로 정한 기간 동안,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 미리 사무를 분담한다. 사무분담에 따라 어느 구성원에게 배당된 사건은, 그의 장애시 또는 그의 업무량으로 인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3)제89조는 망명재판소에도 준용된다.

제129f조

망명재판소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 2008년 망명재판소 신설
 - 난민사건에 대해 별도의 법원을 두어 사건의 처리를 맡김
- 독립적으로 설치된 사법기관으로서의 망명재판소는 행정재판소의 하급심이 아니므로 판결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성격
- 망명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 또는 위법한 규범의 적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함

V. 나가며

- 인권으로서의 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망명권은 몇몇 국가의 헌법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제공동체가 발전하면서 ‘망명권’의 문제는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망명권 신설을 위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치적 난민에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난민의 수용 여부가 최근에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 정치적 난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난민과 관련한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함

참고문헌

- 김한택, “망명과 국제법”, 『강원법학』 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996. 11.
- 권영성, “망명자·정치적 난민에 대한 헌법적 보호”, 『고시연구』 25(2), 고시연구사, 1998. 2.
-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대한국제법학회, 2012. 6.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결정
- 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결정
- 헌재 2014. 6. 26, 2011헌마502 결정
- 헌재 2014. 4. 24, 2012헌바412 결정
- 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결정
-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망명권

발 행 일 2018년 11월 16일

발 행 인 이익현

발 행 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 기본권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www.klri.re.kr